

野 “농민 외면” vs 與 “시장 무시”... ‘거부권’ 양곡법 공방

농해수위 전체회의... 민주, 개정안 내일 본회의서 재의결 추진 의료법 등 6건 의결... 협의 따라 특검법 신속처리 지정도 목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두고 찬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이 법안이 시장기능을 무시하는 법이라고 거듭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농민과 협치

하지 않으려 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달근 의원은 야당을 향해 “(정부 매입) 의무로 고정하고 시장기능을 무시하는 그런 법을 자꾸 고집한다”면서 “(정부는) 쌀 80kg에 20만원 정도의 가격 유지선을 제시했고, 실질적으로 법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이 정책으로 다 반영됐다”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 “의무매입을 하면 (쌀과 타작물 재배 관련) 구조조정도 못 하고, 결과적으로 쌀값 방어도 못한다”면서 “그런데도 강행하는 것 아닌

가”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정부가 농민들의 인격을 심히 모독했다”면서 “정부가 쌀 과잉 생산된 부분을 매입해 주면 농민들이 질 나쁜 쌀을 재배해 (생산량) 더 늘어날 것이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이렇게 수준 낮은 그런 분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농민 인격을 심히 무시하고 농민과 같이 협치를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윤준병 의원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 시장개입 요건이 안 되게 하라고 있는 게 법의 기본 취지”라며 “이게 기본 입장인데 어떻게 재의결을 하면서 매년 (재원) 1조원 이상 소요된다고 과변을 놓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면서 맹비판했다. 주철현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에 따른 경지면적 증가 효과 등을 공식적으로 분석한 적이 없다며 “장관과 총리께서는 마치 연구원이 분석한 것 처럼 했다. 거짓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연구원) 원장한테 물어보라. 이것 어린 아이들도 보고 있어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국회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 의원은 “한동훈 장관 따라하지 말라, 총리도 그렇고 장관들 왜 그런가”라며 답변 태도를 질타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장관을 향해 “그만뒀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 법안은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결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에서 양곡법 재의결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법과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6건에 대한 의결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의당과 협의의 결과에 따라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법과 간호법은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된 법률”이라며 13일 본회의의 처리 의지를 재차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與 불참 속 ‘50억 클럽 특검안’ 野 단독 의결

국힘 반발에 오늘 법사위 불투명... ‘광주 군 공항 이전법’ 27일 상정 가능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 12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13일 본회의 상정이 오는 27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특검법안과 관련,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 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특

검법안의 의결을 선포했다. 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 화천대유 및 성남의들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 위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 ▲ 화천대유와 성남의들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자된 사건 등으로 한정했다. 특검 임명 권한은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부여했다. 대통령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 중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후보자 추

천을 서면으로 의뢰하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15년 이상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에 있던 변호사 중 합의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토록 했다. 이날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면서 12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법사위 전체회의가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전체회의가 열리더라도 여야의 충돌로 파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처리도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위증교사 의혹 김봉현 前변호인 영장 재청구

‘라임사태’ 옥중 입장문 발표 등 조연 혐의... 내일 영장심사

검찰이 ‘라임사태’ 주범인 김봉현(49)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의 2020년 옥중 입장문 발표와 진술 반복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당시 변호인의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0일 영장 기각 이후 한 달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전날 이모(49) 변호사에게 위증교사·무고·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옥중 입장문 발표와 이후 진술 반복을 조연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시킨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김봉현이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한 시기와 내용을 고려할 때 혐의에 대해 다뤄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옥중 입장문 발표 직전 당시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 황희석 최고위원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만남이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발표에 영향을 끼쳤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13일 오전에 열린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1심 선고 전후 옥중 입장문의 진위에 대한 진술을 반복함에 따라 이 변호사 등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해왔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정부, 말로만 식량 안보 외쳐 인식 부재 심각”

서삼석 현안질의 상임위 발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1일 현안질의 상임위에서 “정부도 인정하다시피 쌀이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주식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산품 대비 가격안정과 생산농가 소득보장을 위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을 호도하고 시장에 맡기는 자체가 말로만 쌀이 주식이고 말로만 식량을 안보라고 외치는 헛구호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1년 84.6%에 불과한 쌀 자급률을 2027년까지 98%로 대폭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농식품부가 2022년 서삼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쌀 자급률 하락의 원인이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라고 적시하고 있어

식량자급률 상향을 위해서는 생산량 증대가 시급하지만 실효적인 정부 대책은 제시되지 못했다. 서 의원은 “농촌경제연구원 양곡관리법 통과 시 연간 소요 예산으로 분석한 1조 303억원이 식량안보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결코 과다하지 않다”면서 “현재 국내 1개월 소비량 수준인 40만톤의 공공비축미를 1년분 480만톤까지 늘려가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해서도 “국내 수산 시장의 황폐화가 볼 보듯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어민과 수산인을 위한 소득감소대책 등 대응 매뉴얼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싼
지분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대인동
신안동 **상업용지, 매매**

대인동 - 156평, 신안동 - 176평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특, 변경가
문의. 010-3605-5000